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실장
doowoncha@kistep.re.kr

지자체 내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근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내에 설치된 대학, 출연연 분원, 테크노파크, 지자체연구소, 과학연구단지, 전문생산연구소,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고산업지원단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혹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대상은 중앙정부 부처 사업에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정부연구개발사업 운영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수행하는 기관은 나름 자부심 있고 야심찬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특정부처 사업으로 설립되고 지원기간이 종료하여 자립기에 들어 운영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전략산업도 아니고, 함께 수행하면 사업비 및 참여진 규모가 확대되고 협력이 기대되는 등 시너지가 예상되는데 중앙정부 지원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한 임무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관리기관 평가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기관과 수행하는 사업이 지자체 경제, 산업, 과학기술, 고용창출 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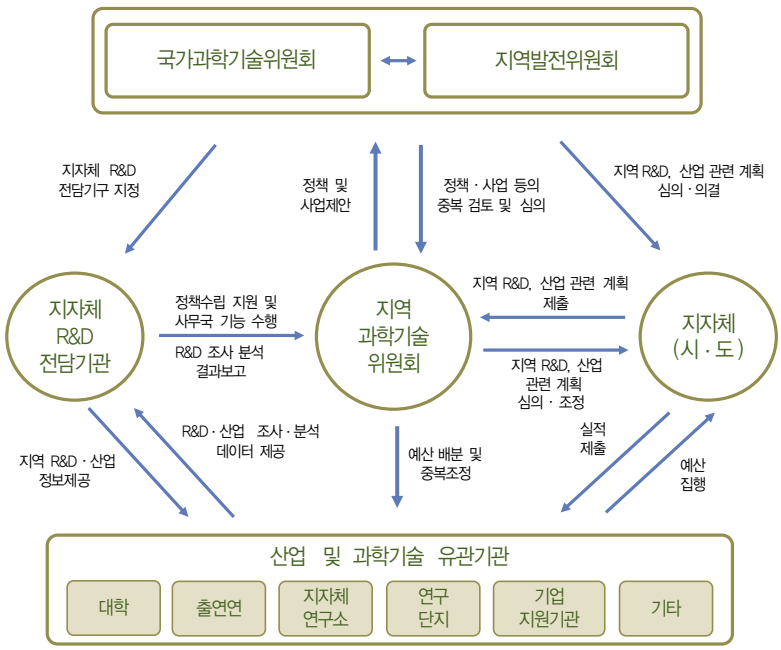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협력체제 구축

지역발전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 원활한 정책 협력과 조정이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 지경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과부(한국연구재단), 중기청(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정부사업들 간 유사·중복, 미흡한 협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

영을 활성화하고 R&D전담기관을 사무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 R&D 거버넌스 정립과 이를 활용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혹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짧은 시간 내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나,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체제 구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지방R&D와 지역R&D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국가R&D와 지역R&D 간 역할분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분담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제 구축, 지역 인력 정주 및 양질의 고용창출 방안, 지자체 R&D전담기관 지정, 지자체 주도 R&D사업 기획 등이 지역R&D 효율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내에서 수행되는 산업, R&D, 지역 발전 등의 사업을 어느 중앙부처가 지원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사업이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되는 것이다.

▶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산업 거버넌스 비교

구분		과학기술 거버넌스	산업 거버넌스
상부	조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광역발전위원회
상부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상부	주요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상부	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하부	지방정부	지자체	지자체
하부	관리기관	대학별 산학협력단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역거점연구단	선도산업지원단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하부	정책대상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지향점		과학적 관점 지역 과학기술역량강화	산업적 관점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관련사업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역기초연구활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등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
중점 영역		기초과학육성과 인력양성	응용, 개발기술개발
성과측정		논문, 인력양성 등	특허, 매출액, 기술이전 등

▶ 지역R&D 거버넌스 구축의 예